

전북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역할 '톡톡'

3년간 애로사항 5641건 접수·인력 842건·환경 및 안전 745건 등...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대기업 투자 유치 일조

전북특별자치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 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일 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도 500개, 시군 2297개 등 총 2,797개 기업이 전담 대상이며, 월 1회 현장 방문과 주 1회 유선 면담을 원칙으로 기업 경영 전반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부서에 연계되고, 처리 결과는 기업에 신속히 안내된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선보인 전담제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접수된 애로

사항이 5,641건에 이른다. 이 중 63.2%가 해소됐으며, 1년 이내 해결이 예정된 단기검토 건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해소율은 78.2%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인력 관련 애로가 842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안전 745건(13.2%), 판로·마케팅 730건(12.9%), 자금 704건(12.4%)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1,712건 가운데 1,257건을 해결하는 등 연도별 해소율은 2023년 54.6%, 2024년 61.5%, 2025년 73.4%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기업과 행정 간 신뢰가 축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시군으로 제도가 확대되면서 교통 안전시설 설치, 환경 정비(제초·제설), 단속 제도 문의 등 기업 현장의 생활 밀착형 문의가 늘었다. 도는 이를 단순한 통계 개선이 아닌, 기업들이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게 느끼고 사소한 어려움까지 편하게 공유

하게 됐다는 신뢰 회복의 신호로 보고 있다.

실제 기업 경영에 변화를 이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A기업은 새 만금산단 신축공사의 전기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담공무원이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등 한국전력과 협의해 연도별 전력 사용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장 준공 시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B기업은 원료 수급 애로를 겪던 중 전담 공무원의 연결로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220톤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했다.

2024년에는 C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전담 공무원의 밀착 지원을 통해 도내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1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5년에는 시군 단위의 현장 밀착형 성과도 나타났다. 진안군은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폐수 처리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했다. 무주군은 경제 취약 지역의 식품제조공장 등록 지원 문제를 관계 부서 협업을 신속히 해결하며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해소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과는 기업이 언제든지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숙한 행정 파트너가 생겼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작은 불편부터 경영 전반의 과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사진=전북선관위 제공)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전북선관위, 내일부터 시장·군수 선거 등 등록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정치관계법상 제한·금지사항 △정당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 처리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후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시장·군수선거 및 지역구도의 원선거,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는 각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며 △22일 군산(국회의원재선거 포함) △28일 전주시 완산구·익산 △28일 정읍 △29일 전주시 덕진구·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 △2월 2일 남원 △2월 3일 김제·장수·고창 △2월 4일 부안 순이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0만호 기자



'2026년 위드(With) 토크데이' 20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임직원 간 소통 행사인 '2026년 위드(With) 토크데이'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가 설명원 전북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 부모 양육 부담 줄이는 보육 정책 본격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0세반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아침돌봄수당 신규 추진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육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별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0세반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기반 확대 △보육료 및 급·간식비 인상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아침돌봄수당 신설 등이다.

먼저 도는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가 대상이며, 정부 보육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17만원 △1세 15만원 △2세 12만4,000원 △3~5세 8만4,000원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영아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0세 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영아 개별 돌봄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정책에 맞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세를 시작으로 올해 4~5세, 내년에는 3~5세까지 월 4만 원씩 순차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넓힌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인상된다. 영아는 1인 1월 2,500원에서 2,600원으로, 유아는 3,500원에서 3,7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는 3% 기관보육료는 5% 인상을 어린이집의 재정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함께 높인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도 강화된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2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연

장반 전담교사는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른 시간 등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수당도 신규 도입된다.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전담 교사를 지정해 운영 시, 교사에게 하루 1만4,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된다.

도는 이번 보육 정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계획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이번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

도, '장애인단체 주도 재활지원사업' 공모

1월 28일까지 접수... 선정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단체가 주체가 되는 현장 중심 재활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활과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재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

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익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운영비나 인건비,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은 현지 실사와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7,83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47개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 역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상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0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이정린·임종명 의원,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남원1)과 임종명 의원(남원2)이 20일 아침 출근길에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정린 위원장은 이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던 2018년 이후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반복적인 대유행과 의료산업, 지역 간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부족, 공공보건의료의 붕괴, 응급실 팽팽한 문제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과 임 의원은 보건복지부 이종규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오랜기간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부지 매입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준비한 남원에 대통령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우선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0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상황 점검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19일 정읍을 대신산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2025년 12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되고, 정읍시의 검토 의견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기간 연장과 공사 재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업주체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공사 기간 중추민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 기간 연장 불허를 포함한 강력하고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선제 운영

헬기·진화인력 총동원해 초동 대응 강화·산불 피해 최소화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조한 겨울철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14개 시·군, 읍·면·동 등 총 28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피해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산림자원과 산불상황실에 설치된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개 조 24명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황 관리와 지휘·통제를 전담한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시·군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방본부와 군부대, 경찰,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임차헬기 3대와 산림청 헬기 7대를 비롯해 지상 진화 인력을 단계별로 신속 투입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상 진화 인력으로는 도내 14개 시·군에 산림재난대응단 706명과 산불감시원 742명을 선발·배치했으며, 야간 산불에 대비한 신속대기조를 편성해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성묘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주요 도로와 공원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강화 배치한다.

이와 함께 무인 감시카메라를 전면 가동하고,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산불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과학적 감시·대응에도 힘을 쏟는다.

/0만호 기자



전북지방경찰위원회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 플랫폼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모델 구현 사업의 시스템 시연회와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취약지 '한눈에'

전북지방위, LX 플랫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범죄예방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 취약 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범죄예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 플랫폼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모델 구현' 사업의 시스템 시연회와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LX의 정밀 공간정보 플랫폼에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범죄 발생 통계, CCTV 위치 등 치안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 취약 지역을 시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북대학교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모델을 구축해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시연된 범죄예방 분석 시스템은 지

역별 범죄 취약 지점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했으며, 순찰 노선 설계와 방범시설물의 최적 설치 위치 분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기존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진행된 사용자 교육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해석 방법과 활용 시제를 중심으로 실습이 이뤄졌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외국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전북형 스마트 치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0만호 기자